

도, 내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 준비

김관영 도지사 주재 점검회의... 현대차 투자 연계·타운홀 미팅 후속사업 '중점'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가 202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 준비를 갖추고 있다.

도는 29일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노홍석 행정부지사, 소관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점검회의를 열고, 중점사업별 쟁점 사항과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국비 요구 총액 1

조1,000억원 규모의 중점 사업 120건을 선정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처 단계의 사업별 쟁점과 의견을 공유하고, 신규사업 4차 발굴 결과를 보고하는 등 향후 대응 방향을 구체화했다.

중점 사업 총규모는 26조5,013억원(국비 21조7,964억원)으로, 새만금 K-

푸드 수출허브단지(2조4,200억원), 새만금호 방조제 수문증설 및 조력발전(1조1,874억원), 새만금신항 접안시설(7,817억원) 등 대형 사업이 다수 담겼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인 현대자동차 투자 연계 사업과 타운홀 미팅 후속 사업을 중점 관리 사업으로 선정해 추진 상황을 점

검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창업 스마트 공유공장 건립(1,000억원) △온디맨드 제조 특화 AI전담 교육센터 운영(240억원) △사용후배터리 순환이용 고도화센터(196억원) 등이 포함됐다.

도는 앞으로도 현대자동차 투자 연계 및 타운홀 미팅 후속 분야의 신규 사업 발굴을 이어가고, 부처안 반영을 위한 대응 논리를 즉각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5월 말 부처안 편성 마감까지 사업 반영 여부도 매일 모니터링한다.

핵심 쟁점 사업에 대해서는 도지사를 비롯한 지휘부가 직접 중앙부처장·차관 및 기획조정실장을 방문하고, 전화·문자 등 가능한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전방위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시군 및 정치권과도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한 사업당 최소 5번은 방문해야 부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며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전북은 정말 절실하구나', '자료가 탄탄하고 설득력 있다'고 느끼도록 실·국 자체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정부 국경 방향에 맞게 논리를 정교하게 다듬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대차 투자 연계·타운홀 미팅 후속 사업 등 핵심 현안인 전북의 미래를 바꿀 소중한 기회인 만큼, 끝까지 치밀하게 대응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29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점검회의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실무자들이 중점사업별 쟁점 사항과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지도 축하합니다

“공감으로 전북의 일상을 건강하게”

윤해아 민주 전북도의원 비례대표 출마 공식화 “사회적 약자로서 겪은 경험 바탕으로 도민 삶 개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윤해아 예비후보가 29일 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감으로 전북의 일상을 건강하게 바꾸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윤 예비후보는 자신을 “청년이자 여성,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라고 소개하며, 사회적 약자로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별과 장벽 속에서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며 “이 경험을 도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변화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주요 공약으로는 △청년이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살고 싶은 전북’ 조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한 ‘책임 행정’ 실현 △장애인·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무는 ‘무장애 전북’ 구현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주장하는 등 복지 실현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윤 예비후보는 “전북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만큼 무장애 환경과 유니버설 디자인은 필수”라며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해 누구나 차별 없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는 전남 목포 출신으로 4살 때 소아암으로 투병한 후 중학교 때 왜소증 판정을 받았다. 목포 해인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전북대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사회적협동조합 해시담 이사, 전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회 복지위원을 맡아 활동하는 등 전북에서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는 전북도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강정희·윤해아·김동우·박병철 등 4명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 12개 시민단체 “이원택 빈자리, 강은호가 이어받아야... 전북 대전환 책임자”

전북발전연합회 등, 강 전 방사청장 민주 군산·김제·부안을 전략공천 촉구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원택 의원의 전북도지사 출마를 위한 시뮬러 공석이 된 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가운데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의 전략공천을 공개 요구하며 정치권 압박에 나섰다.

단순한 후보 추천을 넘어 새만금 개발 방향과 전북 산업 구조 전환까지 제시하며 ‘전북 대전환’을 위한 인물론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북특별자치도발전연합회 등 도내 12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2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 군산·김제·부안을 전략공천을 촉구하고 있다.

규정하며, 단순한 지역 대표 선출을 넘어 전북 미래 산업 전략의 방향을 결정짓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내세운 핵심 논리는 ‘실무형 경제 리더십’이다. 강 전 청장을 “전북이 낳은 세계가 인정하는 방산 전문가이자 결과로 증명된 행정가로 규정하며, 방위산업 수출 분야의 과거 성과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수조 원 규모의 사업을 실제로 성사시켜 본 경험과 글로벌 협상력을 갖춘 인물만이 새만금의 잠재력을 현실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어 “이제는 말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받는 인물이 필요하다”며 전문 행정가 출신 후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구체적 구상도 공개됐다. 단체들은

현재 특정 지역에 집중된 방위산업 기반을 분산해 새만금에 신규 방산 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전북을 첨단 산업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소소재, 2차전지, 미래 모빌리티 등 기존 전북의 전략 산업에 방산을 결합해 군산·김제·부안을 잇는 ‘산업 끝단 트라이앵글’을 구축하려는 것이 핵심 구상이다.

이들은 “방산 기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는 구조를 바꿔 새만금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전북을 새로운 산업 중심지로 도약시키고 국가 경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인재 양성과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핵심 의제로 제시됐다. “기업 유치만으로는 지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

다”며 지역 대학에서 양성된 인재가 지역 산업에 취업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강 전 청장이 전북대학교와 협력해 방위산업 관련 학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육과 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권을 향한 메시지도 분명했다. 단체들은 “지금 전북에는 당리당략을 따지는 정치인이나 지역의 자존심을 세울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전략공천은 특정 정당의 이해를 넘어 전북의 미래를 위한 국가적 결단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전북이 키운 인재가 다시 전북 발전의 중심에 세우는 것이 도민의 요구”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편 군산·김제·부안을 보궐선거는 전북 정치 지형 재편의 분수령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여권 내 공천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광수 전 청와대 행정관, 김준진·김종회 전 국회의원, 박준배 전 김제시장, 최수학·홍석빈 씨 등 복수의 후보가 거론되며 경쟁 구도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의료·문화·종교계를 망라하는 12개 시민사회 단체가 특정 인물을 공개 지지하며 전략공천을 요구하되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시민사회의 집단적 목소리가 향후 공천 과정과 전북 정치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지선 압승 넘어 전북 성공 앞장”

이원택, 민주 도지사 예비후보 등록... 지선 승리 대장정 돌입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29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6월 3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대장정에 돌입했다.

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은 이원택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전북도지사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이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에 대해 “민주당의 승리를 넘어 전북의 성공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향한 힘찬 출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과 함께 지방선거 필승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29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6월 3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원택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전북도지사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이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에 대해 “민주당의 승리를 넘어 전북의 성공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향한 힘찬 출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과 함께 지방선거 필승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 8년간 국회에서 전북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많은 땀을 흘렸다”며 “국회의원직 사퇴는 마침표가 아니라 더 큰 전북을 위한 힘표”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전북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겠다”며 “현대자동차가 새만금에 9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계획이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정력을 다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예산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도지사로서의 책무를 쏟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민주 도당 “혁신당, 정책 중심 경쟁 나서야”

“후보자 검증 필요하나 근거없는 의혹 제기 유권자 선택 방해”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최근 선거 국면에서 불거진 의혹 제기 관련 내용을 스스로 부인한 사실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다시 부각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선거 과정에서 모든 주장과 정보는 철저한 사실 검증을 전제로 해야 하며,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객관성과 균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는 건전한 정치 경쟁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울러 민주당은 고창군수 후보로 확정된 심덕섭 후보에 대해 “오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인물”이라며 “후보 평가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아니라 정책과 성과, 비전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당은 조국혁신당을 향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일방적 주장에 기대기보다 스스로에 대한 검증과 정책 경쟁을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최근 선거 국면에서 불거진 의혹 제기 관련 내용을 스스로 부인한 사실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다시 부각시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선거 과정에서 모든 주장과 정보는 철저한 사실 검증을 전제로 해야 하며,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객관성과 균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는 건전한 정치 경쟁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울러 민주당은 고창군수 후보로 확정된 심덕섭 후보에 대해 “오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인물”이라며 “후보 평가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아니라 정책과 성과, 비전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당은 조국혁신당을 향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일방적 주장에 기대기보다 스스로에 대한 검증과 정책 경쟁을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혁신당 지방의원 비례 신청자 5명, “공천 전 과정 답정 공천”

“단수공천 결론 정해놓은 채 절차만 진행”·“면접만으로 탈락 결정” 등 반발 잇따라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위원장 정도상)의 도·시·군의회 의원 비례대표 공천 과정을 둘러싸고 당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북 도·시·군의회 비례대표 공모에 참여했던 조국혁신당 당원 최영심 전 도의원과 전현정 조국혁신당 군산시의원 비례대표 신청자 등 5명은 2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천 전 과정이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으로 진행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있다”며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의 비례대표 공천은 특정 후보를 미리 정해놓고 진행된 ‘답정 공천’이자 밀실 각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모와 면접은 형식에 불과했고, 단수 공천으로 결론을 정해놓은 채 절차만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부 신청자들은 면접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신청자는 “당원·당구에 따르면 비례대표는 당원 투표를 통해 선출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면접만으로 탈락이 결정됐다”며 “당원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천 심사 과정 전반이 공개되지 않고, 자신들의 재심 요청 역시 기각된 점을 문제 삼았다.

장애인 후보로 지원한 당원 역시 “공정한 경쟁 기회조차 없이 탈락해

역을 했다”며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례대표 선정 기준 및 심사 과정 전반 공개 △전북도당 위원장의 책임 있는 해명 및 결단 △단수 공천 철회와 재경선 실시 등을 요구했다. 또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원 및 도민들과 연대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혁신당 전북도당 측은 공천 과정이 당원·당구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정도상 도당위원장은 전화 통화에서 “경선 가능한 후보군이 형성된 지역은 경선을 실시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단수 공천을 결정했다”며 “중앙당 재심에서도 공정성이 인정돼 미의 신청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이만호 기자